

수 신 : 각언론사

담 당 : 시민교통환경센터
(332-6044)

제 목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주체에
관한 시민단체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요청건

총페이지 : 표지포함 6페이지
5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시민단체토론회

주최 : 서울특별시

주최 : 서울특별시

주최 : 서울특별시

주최 : 서울특별시

주최 : 서울특별시

주최 : 서울특별시

주최 : 서울특별시

주최 : 서울특별시

☐ 일 시 : 1996. 6. 20.(목) 14:00~16:00

☐ 장 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의실

☐ 공동주최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생활협동조합 중앙회

서울YMCA

시민교통환경센터

한국도시연구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에 관한 시민단체토론회 개최 취지

교통시설 설치·관리권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경찰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입장도 서울시와 동일하여 중앙정부 부서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자치체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울시에 대해 지하철수사대를 철수하는 방침을 세우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대로 교통시설 설치·관리권을 시로 이관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경찰청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결의를 공식발표했다.

교통안전시설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지속된다면 시민안전에 중대한 위협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한해 30여만건씩 발생하여 1만여명이 죽고 5만명이 영구장애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노인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가고 어린이교통사고 대부분이 집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와 경찰청, 나아가 5대 광역시와 경찰청의 대립이 시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매듭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단체토론회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객관화하고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찾아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서울시 및 경찰청과 중앙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중앙정부 부서와 자치체 간에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은 비단 교통안전업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토론회 개최와 향후 시민단체의 공동대응 양식이 과도기적 지방자치를 정착시켜나가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토론회 개최의 주요목적이다.

토론회 프로그램

☐ 주최측 인사말 및 토론회 취지 설명

☐ 사회자 : 참여연대 손혁재 상임중앙위원(열린사회연구소 소장)

☐ 서울시 및 경찰청의 입장 설명

서울시측 : 서울시 교통관리실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책과

경찰청측 : 경찰청 교통지도국

* 참여 거부시 양측 입장이 담긴 공식문서를 주최측에서 설명

☐ 지명토론

김영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이인원 (대한교통학회 회장)

이은상 (경실련 교통광장 사무국장)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최정환 (시민교통환경센터 사무총장)

☐ 시민단체 공동입장 정리 및 발표

토론회 개최장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전화 : 796 - 8364)

< 약도 >

